

비밀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되팔기 단속

식약처, 온라인몰 계도 및 행정지도

매점매석 불공정 판매행위 단속 예정

정부가 이달부터 출시된 의약외품 ‘비밀차단용 마스크’의 온라인 되팔기 행위 등을 단속한다. 초기 생산 공급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개인이 파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최근 비밀차단용 마스크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되팔기 등 행위가 나타난다”면서 “해당 사이트에 계도 및 행정지도를 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밀차단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필터가 적어 얇으면서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수준의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밀 차단용은 평균 55%~80% 수준에 이른다.

기존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의 차단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상 생활 편의성을 이유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제품은 9개종으로 4개 회사만 생산 허가를 받았으며, 1개 회사만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온라인 물이 마비가 되고, 비밀 차단용 마스크를 먼저 구입한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기존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에 나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이 구매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

어나고 있다. 양진영 차장은 “항후에도 공적 마스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구매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나온 해군 병사, 만취한 여사친 성폭행 시도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강간미수 혐의로 해군 A상병(21)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48분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이성 친구인 B씨(21·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를 나온 A상병은 린스주방 형태의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상병은 결국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군 헌병대에 A상병 신병을 인계했다.

전주교도소 진입 소동 40대 교도관에게 둔기 휘둘러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전주교도소 정문을 지키던 교도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도소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넘어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도관들에게 저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교도관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서 그는 “교도관에게 불만이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에도 전북도청 도시시설 앞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폭언하는 등 난동을 피운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며칠 전 도청 소란으로 훈방됐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인천 50대 여성, 트럭 추돌...2명 부상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A씨(50대 여성)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돌던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역시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원 벤치서 음란행위 40대 노숙자...CCTV에 덜미

어린이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40대 노숙자가 공원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공연음란 혐의로 노숙자 A씨(4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0시10분쯤 광주 서구 한 어린이공원 벤치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늦은 시각이라 공원에 어린이는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원을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몇년간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해왔고 이날도 공원에 잠을 지러 왔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 관제센터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 공원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음란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만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부실시공 시정명령 받은 시공업체 “감리단이 2천만원 요구” 폭로

해남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업체가 되레 감리단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발주처인 해남군은 부실시공을 적발하고도 시공사 교체나 감리단 책임추궁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사실 감추기에만 급급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해남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로 방류해 인근 하천과 서해연안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순조로운 것 같은 공사는 핵심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설계보다 턱없이 높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3월 감리업체의 검토 결과 지난해 5월 완공된 450톤 규모 하수처리장이 설계보다 1.03m 높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우 원활한 오수 흐름이 이뤄지지 않아 하수처리 기

해남 하수처리시설 공사...설계보다 1.03m 높게 시공 시공사, 금품요구 폭로로 버티기...해남군은 ‘쉬쉬’

위에 추진 중인 계곡면 가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초 착공됐다. 이 사업은 국·도비 26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 관로 3.4km를 설치하게 되며, 2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준공된다. 해남군은 이 사업을 통해 오수와 우수 분류화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 정화하고, 하수를 방정수질 이하

능이 크게 저하된다. 하지만 시정요구를 받은 업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배수관 설치를 완만하게 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해남군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난 4월 업체를 불러 하수처리장 재시공을 지시했다. 이에 이 업체는 최근 해남군 관계자에게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감리단장이 20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감독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불만과 함께 책임소재를 감리단으로 돌리고 있다.

도로공사 위해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

법원 “한전이 도로공사에 5억원 지급” 판결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지중 송전선로를 이설할 경우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한전이 점용료를 감면받았다면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 일호)는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한국도로공사에 5억153만33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전은 인천 중구 일대에 전기통신 등을 목적으로 한 지중 송전선로를 설치했다. 해당 부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감면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3월쯤부터 인천과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 공사 부지에 포함됐다. 결국 공사를 위해 지중 송전선로 이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1월11일 A업체와 고속도로 공공시장물 이설공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공사는 수탁사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한전은 지중 송전

선로 이설공사의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년 6월15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용을 지급해 선로 이설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공사비용 부담 주체 및 부담비율에 관해 상호 협의하거나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협약을 한전과 체결했다. 공사는 이뤄졌고, 한국도로공사는 업체에 2018년 12월19일까지 공사비용으로 18억1758만3610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2019년 7월5일 한국도로공사에 공사비용 명목으로 14억6339만561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업체에 마지막으로 지급할 날로부터 한전이 돈을 지급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해 5억1309만4316원을 받지 못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전은 한국도로공사가 주장하는 공사비용이 과다 산정됐다면 한국도로공사가 청구한 금액 중 3010만7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전이 점용료를 감면받은 만큼 이설공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주장한 금액 중 1156만1016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